

전염병·경제 위기 하에서도

저항이 가능하다

관련 기사 2, 5, 12면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2, 3면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4면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7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8~9면

4월 혁명 60주년

민중의
잠재력이
드러나다

11면

광양항 화물 노동자들

항만 봉쇄
파업으로
승리하다

12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용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현대차 2차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맞서 파업하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장위원

현대차 울산 1~5공장에서 라인 정비·수리업무(보전업무)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성진·마스터시스템) 비정규직 노동자 70여 명이 3월 31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사측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주간에 10시간씩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사측이 임금 보전 없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려 한다. 이렇게 되면 주말 특근까지 다 해도 월급이 60~70만 원 정도 깎인다고 한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상여금, 성과금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시간이 줄어도 일의 양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되레 강화된다. 사측은 주말 특근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노동자들이 공장 곳곳에 붙인 자필 호소문에는 절절한 외침이 가득하다. “임금이 삭감되면! 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저는 부모를 모시고 아이와 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주말도 없이 주 6회가량 초과 근무를 하고 이런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임금 보전과 토요일, 일요일 근무 자율화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52시



현대차노동자하청 노동자들

출근 홍보전 중인 하청 노동자들

간제 도입을 주장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하청업체 성진의 박찬철 조합원 대표는 말했다.

“우리는 2차 업체라는 이유로 1차 업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에게 코로나19 마스크를 차별 지급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그 회사가 바로 우리 회사입니다. 회사는 1회용 방한대를 주면서 빨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현대차 공장이 휴업할 때도 우리는 출근을 강요 받았습니다. 출근을 안 하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징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조합원들은 보름 가까이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비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유급 휴가를 줬고, 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번에도 사측 안을] 거부하면 징계를 하거나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노동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김문성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잘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부문 관료들이 시스템 재정비를 한 것이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과 다른 점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도하다 싶은 적극 방역과 초기 대량 검사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이야말로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이라 정부 관료들조차 학습 효과를 유지·발휘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조차도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과로사까지 감수한)과 권위주의적 행정 수단, 정치적 마녀사냥을 이용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보건 인 프라(병상과 인력)가 열악하기 때문이다.(코로나19 의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이 거절돼 사망한 환자들이 생긴 이유) 문재인은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공공 병원(병상)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는 혼선의 주범이었다.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될 테니,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고 발언해 역효과를 냈다. 또, 청와대는 신천지를 이용한 주의분산 효과를 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방침과 엇갈린 발표를 해 혼선을 일으켰다. 여당 지자체장들조차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는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부하고 기업주와 경제 관료의 편을 든 것도 청와대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신천지 압수수색 운운한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범죄 혐의자가 증거를 감추거나 없앨 가능성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다. 그러므로 그 성공은 사전 보안과 신속함에 달려 있는데, 추미애는 압수수색할 장소를 공개 지목했다. 무엇보다 압수수색은 재판에서 범죄 혐의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로,

자들이 단체로 노조(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다니면서 정비하고 수리를 합니다. 우리가 파업해도 라인이 당장 서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하는 고장을 잘 고치지 못해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4공장의 도장 라인이 한 시간 셧습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고 안달이다. 이번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도 그런 공격의 일부이다.

지금은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건 후퇴를 압박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전체 현대차 노동자로 공격이 확대될 수 있다. 이번 파업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조합원들이 쓴 호소문을 보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분노합니다. ‘정말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사실이야?’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힘을 많이 받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이 부착한 호소문에 서도 연대를 바라는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박찬철 조합원 대표는 정규직 노조(현대차지부) 집행부와 간담회도 추진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가 나선다면 우리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 활동가들이 지지 자보 등을 내주셔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지부 집행부가 연대에 나서라고도 요구해야 한다. 기층의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자.

▶ 관련 기사 3편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김문성

4월 5일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대표 황교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긴급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70퍼센트 가구 선별 지원 방안도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같은 당의 유승민이 7일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황교안을 비난했다. 통합당 의원의 상당수가 세계의 주요 정부들이 돈을 퍼붓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서민 지원 증액에 반대한다. 물론 기업 지원에는 그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황교안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자고 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에서 고전을 하자 제1야당 대표가 당론을 무시하는 돌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총선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그 대응 문제를 두고 각 정치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3월에야 비례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된 주요 정당 중 민주당과 민생당이 비례 1번 후보를 보건 또는 코로나 대응 전문가로 내세웠다. 안철수의 국민 의당도 그렇다. 문재인이 2차 추경을 해서 70퍼센트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든 내놓은 것은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불가피하다고 압박한 탓이 컸다.

반면, 통합당은 반사이익 챙기기에 더 집중했다. 중국발 입국을 막아야 했다는 얘기를 녹음기처럼 반복하며 말이다. 황교안의 돌출적 제안은 그런 대처가 선거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음을 뜻한다. 물론 이 제안에 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순 없다. 문재인이 거둬 대폭 지원, 보편 지원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황교안이 반사이익을 노리고 역제안을 한 것이다.

둔감

코로나19가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됐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곧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대안을 낸 세력에게 자동으로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중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그로 말미암아 제약 받는) 자신감 때문에 현실적 가능성(공약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당선 가능성)을 우선적인 투표 기준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진보·좌파의 대안이 맘에 들더라도 소수 정당들이고 당선이 어려워져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선택지(투표)에서 빼는 경향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 나간 진보정당들은 대부분 노동계급에 피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발하며 노동계급과 서민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과 공공의료(병상, 인력) 투자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주민도 포함해 모든 개인



누구를 구할 것인가

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요구를 반대하고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의 긴급성과 보편성에 비춰 보면 매우 둔감한 상황인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3년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총선이므로 총선 관련 여론 주이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와도 밀접하게 연동돼 왔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오래 전부터 지지를 하락 위험에 처해 있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 조국의 특권을 옹호한 위선과 평등의식 결여에 대한 대중적 분노 때문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2월에 추가됐다. 코로나 방역 강화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방역 조치 3주 만에 긴장된 태세를 풀자고 대통령이 선불리 나섰다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다.(신천지 공격은 이 과오를 덮으려는 책임전가이자,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전술이었다.)

이때만 해도 통합당 지지율이 반사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였다. 총선 패배를 막으려고 정부는 대구 지역에 방역(확진자를 찾아내려는 검사와 이동 억제)을 집중했다.(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신천지 마녀사냥에 나섰다. 물론 꽤 씹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3월 중하순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 감염 폭발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이탈리아·스페인·영국·일본 등지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중국(중국 정부의 사망자 발표 규모를 믿을 수 있다)이나 인접국 한국의 수개월치를 순식간에 훌쩍 넘겨 버렸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 하고 있다는 착시적 분위기를 언론을 통해 조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책에도 성의를 안 보이더니, 선거 돌입 직전에 막말 친박 출신인 민경욱, 용산참사 주책임자 김석기 등이 공천에서 살아나고 연이은 막말 소동이나 벌였다. 통합당이 말로만 떠들고 긴급 재난 지원을 반대한 것과 달리, 민주당 출신 단체인들은 빠르게 긴급 재난 지원 성격의 보조금을 지출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통합당은 4월 8일 김대호, 차명진 두 막말 후보를 제명해 총선 후보직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당의 헛발질이 제살 깎아먹고 있다 해도 여전히 민주당의 코로나 생계 지원 방안은 미흡하다. 황교안의 제안이 인기를 얻을까 봐 다급하게 여권도 당대표 이해찬이 나서서 전 국민 지급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액수는 황교안의 제안만도 못하고, 지급 시기도 분명히 약속하지 않고 있다.

차별화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주류의 초기 대응에도 약점이 있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발병 초기에 계급을 초월하는 범국가적 위기이므로 위기 대응을 위한 전사회적·범국민적 단합에 함께하겠다는 식이었다.

전광훈과 우파 개신교가 꼴사나워도 민주노총 지도부와 진보정당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자체에 찬성하거나 협조한 것은 과오였다. 또, 민주당 이재명·김경수 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히려 반대했다. 이미 2월부터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와 임금 삭감 공격, 안전·방역 미흡과 차별 사태들이 불거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정의당은 3월 하순에 가서야 비로소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강화했다.

한국은행의 4월 8일 발표를 보면, 올해 3월 기업과 가계 모두 은행 대출이 증가했다. 부동산 호경기도 아닌데 가계 대출이 2월, 3월 모두 약 10조 원씩 증가했다. 시사적이다. 기업 대출도 증가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의 대출이 10조 원 넘게는 것이다.

장기 침체 상황에서 투자에 소극적이 되면서 대기업들은 지난 1~2년새 은행 대출을 급격히 줄여 왔다. 그런 데 한 달 동안 대기업 대출이 10조 원 넘게 늘었다. 투자가 아니라 긴급 운영 자금일 것이다. 생산, 매출이 줄어도 고정 지출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복지에 돈 풀다가 살림 거덜 난다는 우파의 반박 논리는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응을 한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상당수는 박근혜가 대중의 질타를 받자 상황실에 “살려야 한다” A4 용

지를 붙여 놓고 쇼를 한 것도 기억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A4가 아니라 현금 살포를 해서라도 가족과 개인들의 생계 살리기를 바란다. 주류 양당이 뒤늦게 공약 경쟁을 하는 듯하지만, 대중의 불만과 요구가 더 강력하게 표출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득표를 위한 말대결 이상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기업주들과 정부 관료들이 막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소득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일으킨 고통에 더해 경제 위기로 인한 사용자 측의 공세가 강화될 조짐이다.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선거 공간에서도 이 문제에서 차별화된 정부 비판과 진보적 대안이 공론화돼야 한다.

▶ 관련 기사 2면

신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쓰고 엮음, 책갈피, 228쪽,
12,000원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황교안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중 의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50명대로 줄어들자,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사망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환자·격리자의 수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기존 입장을 바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처음에는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 평가도 크게 수정됐다.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들(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치명률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때문에 사망자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치는 현재 이탈리아(12.6퍼센트), 영국(11.1퍼센트), 스페인(9.9퍼센트), 프랑스(9.5퍼센트) 등지에서 사스의 치명률(약 11퍼센트)에 가까워지고 있다. 1차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독일에서도 어느새 치명률이 1.9퍼센트를 넘었고, 세계 전체로도 계속 높아져 6퍼센트에 근접하고 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동안 제시된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림에서 보듯,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 인구가 10배쯤 많은 수도권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을 마련해 두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구로 폴센터 노동자의 가족이 최근 사망한 것에서 보듯 위험은 여전히

다.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도 현재진행형이다. 수도권에서만 여전히 1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 있고,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불안 요소는 너무나 많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면역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중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는 시기와 방안만 찾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윤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대중의 생계보다는 기업 경영 지원에 치중된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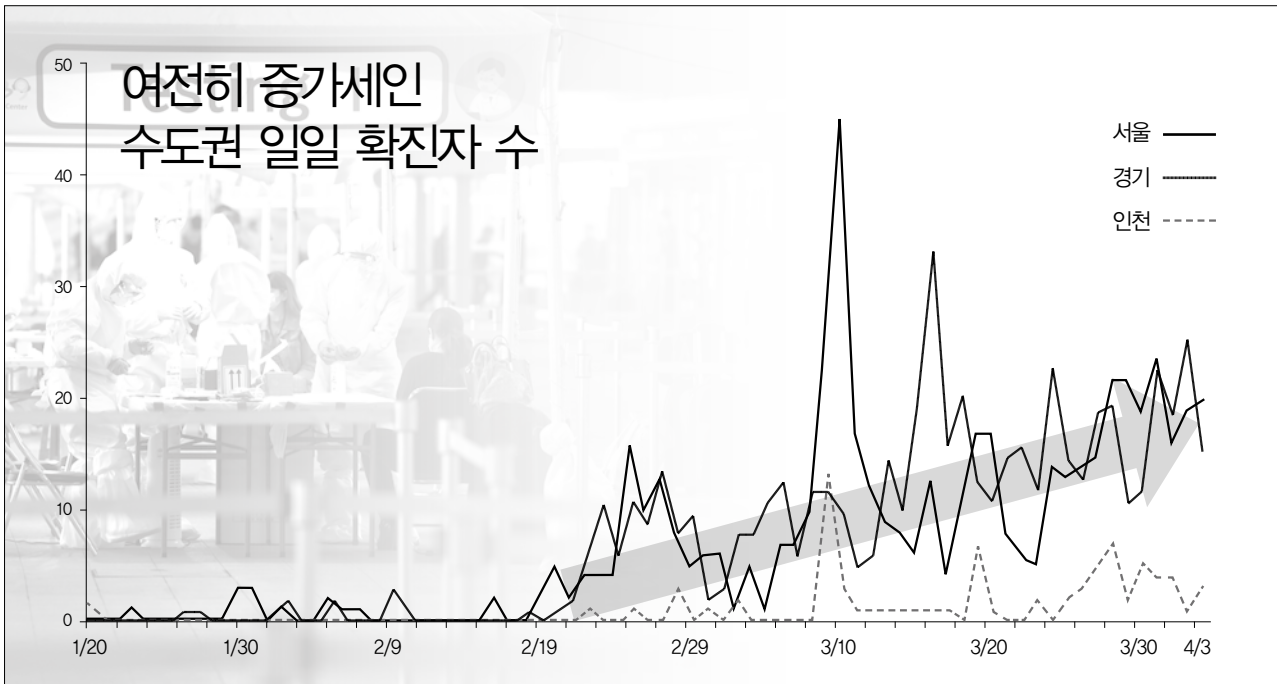
예를 들면, 4월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번 달부터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80퍼센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대구에서 환자가 급증하기 전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들이 야외 나들이와 외출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데다 별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미어터지는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말 공원 나들이를 걱정해야 할까?

지금 필요한 것은 거리 두기 완화 시기와 방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 업무들에 대한 휴업 명령 등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을 내리는 것이다. 의심 환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고 병원 등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마땅히 이뤄져야 할 조치를 문재인 정부가 끝내 회피하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때문에 총선이 지나면 이윤을 보호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유혹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 감염병만큼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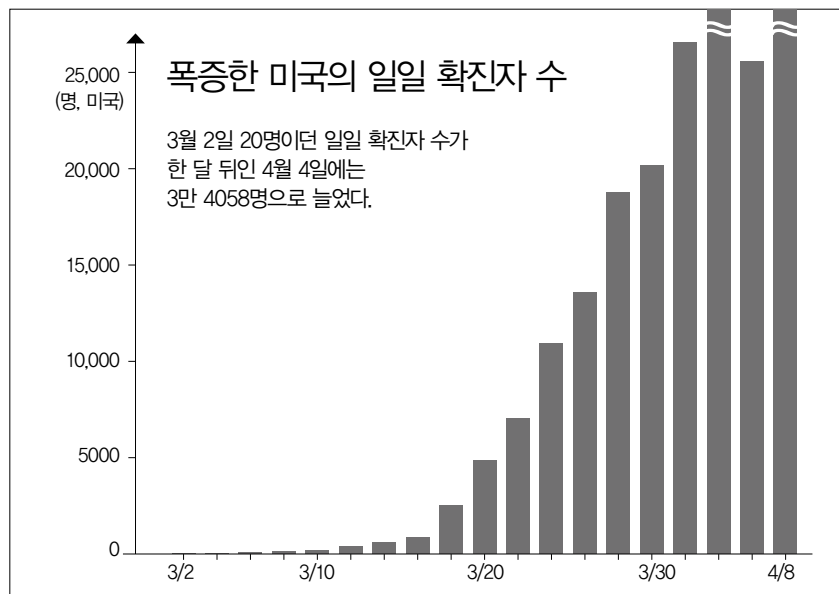
나 치명적인 조치들 — 해고, 무급 휴직 등 — 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들도 이에 맞선 투쟁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이번호 기사 ‘현대차 2차 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반대 해 파업’,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를 보시오.)

방역 완화 기회만 살피는 문재인 정부는 애먼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제는 별 의미도 없는 입국 통제나 전자팔찌 등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을 도입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이려 하고 있다.

전자팔찌 등 권위주의적 통제에 의존하는 정부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외출 사례가 거듭 보고되자 정부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 때문에 몇 분 동안 놀이터에 다녀온 여성을 경찰에 고발하고, 집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등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 수사 얘기까지 나온다.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해 효과를 보려는 속셈인데, 효과는 없고 애먼 피해자들만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작 막아야 할 큰 구멍 — 일터와 대중교통 등 — 은 열여든 채 작은 구멍들만 틀어막으려는 식이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한국의 수도권에서 미국과 같은 폭발적 증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피해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는 조치다.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부는 특정 종파 마녀사냥이나 (불필요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렇고서 ‘민주주의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자가격리자들의 외출을 줄이고 감염 확산을 통제하려면 권위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장기간 집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적지 않

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 준다. 2주간 아이를 데리고 집 안에만 있으라고? 영국 등지에서는 외출금지령이 계속되면서 가정 폭력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기간의 생계 비용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격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병원이나 각종 시설 등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주들에게는 100조 원 넘게 퍼 줄 정도로 후한 문재인 정부가 그 절반만이라도 평범한 서민층 가정에 제공한다면 격리 조치를 어길 사람은 크게 줄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 경제가 아니라 생존 위해 필요하다

뒤늦게 그것도 국민의 70퍼센트에 게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불만이 커지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일 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국회에서 정하자니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지금 대상뿐 아니라 액수와 기간도 문제다. 몇 달 동안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고작 한 차례 30만~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 그야말로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못마땅해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자들에게 지급하면 가난한 이에게 돌아올 액수가 준다는 우려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이는 위기의 수준을 간과한 물음이다. 밑바닥 서민층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국가가 노

동자·서민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되려 온건 개혁파의 문제의식(경제 회복 효과 없이 재정 적자만 커진다는 우려)과 연결된다.

좌파적인 재난기본소득 요구는 훨씬 더 높은 액수를 요구하며, 그것을 위해 정부 재정을 추가로 대폭 투입하라고 주장한다(재정 적자 감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긴급한 생계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니 이런 요구는 정당하다. 이런 접근법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요구가 무급

휴직이나 해고 등으로 절박한 생계 위협에 놓인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립될 이유가 없다.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돈을 받는 게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당장 필요한 현금 지급을 삼가는 것도 이상하다. 충분한 액수가 보편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노동자·서민들은 권리로서 재난수당을 지급받고 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무상급식처럼 말이다.

선별 지급은 기존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혼선을 자아내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걸러내는 부작용이 있다. 게다가 국가가 수급자들을 낚아오며 취급하며 통제하는 효과를 낸다.

현재의 위기는 체제 안정화를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려면 긴급한 필요에 대한 요구를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져야 한다.



사진 출처 대구가톨릭병원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유혜린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이 필요하다는 여론 덕분에 더 확대됐다. 정부 지원으로 중소 병원부터 점차 확대되다가 2~3년 전부터는 대학병원들도 간호간병통합병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병동도 일반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바뀌면서 간호 인력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보조인력도 생겼다. 일반 병동에서는 하지 않던 업무들이 늘어나긴 했어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환자를 간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 병원의 1200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고작 200병상에서만 시행된다. 나머지 1000병상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하기 힘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더 신속히 확대돼야 한다.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간호 인력이 간병인과 보호자의 감염 여

부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열이라도 나면 혹여나 코로나 감염일까 봐 간호사들은 노심초사한다.

살얼음판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입원을 통제하다 보니 얼마 전에는 환자 수가 조금 줄기도 했다. 하지만,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시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반 병동 입원 환자는 상주하는 보호자가 한 명만 허용된다. 보호자가 교대할 수도 없다. 보호자도 최대한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퇴원까지 병원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조처에 따를 수 없다면 간병인을 써야 하고 간병인이 있으면 보호자의 환자 면회는 제한된다.

인력 부족 때문에 보호자와 간병인을 내보내지도, 충분히 허용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만큼 간호 인력이 있다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환자와 보호자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 나가거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노동자·서민은 가족을 돌보느라 병원에 상주하는 것이 대단히 큰 부담이다.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하루 간병비만 7~10만 원이나 든다.

코로나19로 병원 인력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노동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매일 수시로 바뀌는 업무 매뉴얼과 간호 인력 총원 없는 환자 관리 규정 강화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몰라 병원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응급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하는 중증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엑스레이와 폐 CT 검사가 필수다.

그런데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증 환자를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보내지 못하고 대기시켜야 하니 상태가 악화될까 봐 우려스럽다. 응급실에 온 폐렴 의심 환자의 경우 음압 격

리실이 부족해서 격리할지 말지,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나마 메르스 경험 덕분에 규정 등이 많이 개선된 게 이 정도다.

병원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병원 규정이 자주 바뀌고 강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환자들은 의사 판단에 따라 엑스레이를 찍거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원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규정이 바뀌어 진료를 받거나 입원해야 하는 환자 모두 안심진료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만 진료와 입원을 할 수 있다.

인력·시설·장비 확충

그런데 검사는 의무화하고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병원 내 전파를 막겠다며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부당하다.

병원마다 방어 대책도 다르고 검사비 부담 여부도 각기 다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나 병원이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려면 병원들이 의료 인력을 늘리고 의료 시설과 장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사들이 인력과 의료장비 부족에 항의해 시위를 하고 있다. 독일의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위험수당과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한국의 병원 노동자들도 이런 요구를 해야 한다. 선진국이라면 유럽과 미국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국의 보건 의료 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와 병원에 제대로 된 대책과 준비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의료시스템, 무상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트럼프, 코로나19에도 “직장에 나가라”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거부하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조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려고 강조했다. 사람 목숨을 얼마든 대가로 치러서라도 말이다.

4월 4일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면 서도 미국인들이 “일터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라. 사람들에게 일하러 가지 말라고 돈을 주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트럼프가 이런 잔혹한 말을 한 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중보건국장 제롬 아담스가 이렇게 말한 다음이었다. “진주만 공습 같은, 9·11 테러 같은 시기가 올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 현상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만 코로나19로 1만 명 넘게 사망했다.

몇몇 부문에서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매사추세츠주(州)에서는 1만 명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장 안전 문제로 4월 6일 파업 돌입을 계획했다.

노스애틀랜틱지역건설노동자연합(NASRCC) 노조 위원장 톰 플린은, 일부 건설 현장에는 안전 조치를 지키게끔 하는 “실질적 강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스탠포아일랜드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은 3월 30일에 직장 이탈 파업을 벌였다. “확진자가 몇 명 나왔냐고? 열 명이다!” 파업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는, 동료 노동자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은 것이었다.

4월 2~3일에는 디트로이트시에서도 파업이 벌어졌고, 아마존 시카고 지사에서도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3월 30일 식료품 배달 업체 인스타카트 노동자 15만 명가량이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장 이탈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4월 1일 물류 대기업 XPO가 펜실베이니아주 팔미라시에서 운영하는 허시사(社) 식료품 포장 공장에서도 노동자 수십 명이 직장 이탈 파업을 벌였다.

4월 2일 콜로라도주 그린리에 있는 육류 가공기업 JBS 미국 공장의 노동자 약 900명이 병가 파업을 벌였다.

공장 노동자들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뒤 이날 행동이 벌어졌다. 이 공장 노동자들은 대개 이주노동자이고 공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27가지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안전 조치가 턱없이 모자란 것을 규탄하며 하나로 뭉쳤다.

4월 3일 〈뉴욕 타임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물리적 거리 두기” 지침에 훨씬 더 쉽게 따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데이터를 보면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이동량이 줄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특히 평일에 집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거의 모든 주에서 부유층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며칠 더 빨리 이동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에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었다.

많은 대도시들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이동량은 사실상 0으로 줄었다.

그러나 하위 10퍼센트는 주말에는 이동량이 0에 가깝게 떨어졌지만, 평일이 되면 다시 치솟았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이 발표한 보건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57퍼센트가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서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연소득 4만 달러[한화 약 4800만 원] 이하 층에서 그 비율은 72퍼센트까지 올라갔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699호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National Nurses United

인력·의료장비 부족 항의 시위 중인 미국 간호사들



“노동자들을 보호하라!” 동료를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휴업하지 않자 파업에 나선 아마존 노동자들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사라 베이츠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휴일처럼 제시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외출 제한령이 내려면 부자들은 집 앞까지 배달되는 유기농 채소를 주문하고 유급 간병인을 불러 몸이 약한 친척들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압도 다수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인 작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노동계급 여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들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여성단체 ‘곤경에 처한 임신부들’(Pregnant Then Screwed)의 설립자 조엘리 브리얼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도 위기를 버티기 위해 [희생된 것]은 무보수 노동을 떠안은 여성들이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하지만, 아이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임신한 여성들을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하고, 그렇지 않은 임신부에게는 일터로 나와 일할 것을 강요했다.”

이스트런던 지역 중등학교 교사인 폴린은 외출 제한령 때문에 “살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국 하루에 교대근무를 두 번 뛰는 꼴이 됐습니다. 낮에는 두 아이를 가르치고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직장 일을 합니다.”

“부모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정보 · 통신 분야에서 일하는 제 남편) 재택 근무를 하지만 회사는 근무 시간 단축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양육을 떠맡을지를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한 부모 가정은 어떻게 견디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을 멈춘 것은 학교만이 아니다. 도서관, 어린이집, 급식소, 엄마 모임, 방과후 활동, 청소년 클럽 등이 모두 운영을 멈췄다.

지난 10년간 긴축 때문에 누더기가 된 공공서비스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더한층 쪼들리고 있다.

위기가 오자 공공서비스 중단의 후폭풍은 부모들에게 떠밀려졌다.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들은 양육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점점 더 크게 느낄 것이다. 부모가 무한정 보살핌과 관심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은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양육이 가족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족은 계급 사회가 굴러가게 하는 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일상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돌봄 대부분은 여성이 무보수로 수행한다. 여기에는 대부분 자녀 양육이 포함된다. 나이에 친척 등 다른 가족을 돌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상황은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가 조직된 방식의 산물이다. 예컨대 육아휴직 관련법에 따른 휴직 기간은 여성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이 양육을 더 많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게 된다.

영유아 양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성을 집에 머물게 하여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이 전일제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타당해진다.

압박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해도 — 학교는 국가가 양육에 기여하는 몇 안 되는 요소의 하나다 — 보호자들은 학기 중이 아닐 때, 잘 때, 학교하는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은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해도(대부분 여성들이 그럴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현재 집에 있는 자녀를 교육할지 직장에 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가 격리 같은 조치에 훨씬 큰 타격을 받는다.

영국노동총(TUC)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약 140만 명이 주급 118파운드(약 17만 7000원) 이하를 버는데 이는 법정 최저 병가 수당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동일임금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동일 노동에 대한 성별 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통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성단체 ‘포셋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2019년에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 18.4퍼센트였으며,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그 격차는 최대 13.7퍼센트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에 여성이 대부분인 글래스고시(市) 공무원직 노동자 수천 명이 동일 임금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이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체계적인 차별에 시달려 왔다.

이처럼 여성의 임금이 더 적은 이유 하나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돌보고



어린이집 휴원 등 공공서비스 중단의 후폭풍은 노동계급 여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소하는 것이 여성의 “자연스런” 구실로 여겨지는 데에 있다.

여성이 누군가를 보살피는 본성을 타고난다는 시각은 지배계급에게서 나온 것이다. 때로는 몇몇 페미니스트들도 그런 시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남성이 폭력적이거나 대담한 기질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생물학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로 태어났지 않는다.

이런 고정관념은 체제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여성들의 양육과 가사 부담이 더 커진 동시에, 여성들이 집 밖에서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순이 벌어진다.

국민보건서비스(NHS) 인력의 약 77퍼센트가 여성이다. 소매업 노동자의 약 3분의 2도 여성이고 청소 노동자 대다수도 여성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정부는 여성이 그런 일자리에서 이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이 여성들이 근무 시간을 더 늘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가정에서 똑같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여성들은 노동계급 여성을 고용해 요리나 청소, 양육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불균등은 코로나19 대응행이 지속되는 동안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가정에서 똑같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여성들은 노동계급 여성을 고용해 요리나 청소, 양육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불균등은 코로나19 대응행이 지속되는 동안 더 심해질 것이다.

비좁은 단칸방에서의 외출 제한과 호화로운 별채에서의 외출 제한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을 것이다.

외출 제한이 뜻하는 바는 자녀가 컴퓨터를 쓸 수 있는지, 심지어는 땀가를

대고 쓸 책상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0시간 계약’(호출 노동) 여성 노동자의 경험과 집에서 안락하게 업무를 보며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강 건너 불보듯 경계하는 여성 CEO의 경험은 천양지차일 것이다.

가족이 다음 세대 노동자를 배출하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게 거의 아무 비용도 물리지 않은 채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이 사정들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아이들이 적당한 교육과 보건, 사회화를 통해 생산적인 노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자녀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는 것을 해법으로 여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한 해법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무보수로 수행되는 노동을 집단적 · 사회적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육아는 전체 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가사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그러면 여성들이 아무런 인정과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가정에 수십 년을 바쳐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덜 중요한 일로 취급되고 보수도 형편없던 소위 ‘여성의 일’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제사시는 판에 박힌 ‘해가족’보다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를 정취하려면 노동계급 여성의 돌봄과 보살핌에 의지해 사회를 유지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다

마리 펠레스

프랑스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집행되는 엄격한 외출 제한령 하에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활동 대부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가혹하고, 계급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격리 방침을 위반하거나 이유 없이 외출하면 벌금 135유로(약 18만 원)를 내야한다. 그 후 15일 이내 한 번 더 이를 위반하면 벌금은 1500유로(약 200만 원)으로 쏜다. 30일 이내에 4번 위반하면 3700유로(약 490만 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충격적 영상들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경찰이 기본적인 보건 지침을 모두 무시하고서 코로나19 의심환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한 대 붙잡아 놓은 장면을 담은 것이다. 경찰은 3월 17일 하루에만 총 50만 파운드(약 7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 법률 권리 단체에 따르면, 다음 날 “적어도 5명이 자가 격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유치장에 갇혔다.”

이런 조처는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파시스트 마린 르펜은 통행 금지를 일반화하고 “(식료품 등을 충전) 약탈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더 강경한 단속 조치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니스 코르다쥐르에선 경찰 드른(무인기)이 투입된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엔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정부의 격리 지침을 상기시켰다.

예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벌금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파리, 리옹, 바욘의 빈곤 피치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자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음식 배급 서비스들이 문을 닫아, 실질적 고통이 무뎌지고 있다. 사회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중단했는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보호 장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난해 마크롱의 연금 개혁 야마로 벌어졌다. 핵심 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은 12월 5일에서 시작해 7주 동안 계속됐다. 이 투쟁은 정부에게 쓰라림을 안긴 동시에, 노동자 · 노란 조끼 운동 · 페미니스트 · 기후 위기 반대 활동가들 간의 연대와 정치적 급진화라는 강력한 유산을 남겼다.

마크롱의 약삭빠른 결정들 중 하나는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연금 공격을 유보한 일이다. 물론 마크롱은 적절한 때에 연금 공격을 재개하겠지만, 연금 개혁 중단은 일부 사람들을 이완시켰다. 이 결정은 국회 회결 없이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



“부자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돈을 쏟아 부어라” 권위주의적 책임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

키러던 원래 계획에서 분명 한 발 물러선 것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 국면은 마크롱을 부상시켰다. 한 여론 조사에서 프랑스인 3분의 2가 마크롱의 첫 연설이 진지함과 과학성, 인도주의적 태도가 어우러져 설득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프랑스 인구의 절반이 넘는 3500만여 명이 마크롱의 두 번째 연설을 지켜봤다. 마크롱의 지지율은 매우 오랫동안 최고치를 찍었다.

노동자들의 파업

하지만 이런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의] 모든 지배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이 효과가 없다면 대중은 분노할 것이다. 마크롱에 대한 환멸의 한 징후는 3월 15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이 선거는 프랑스인들이, 적어도 그중 일부가 점점 더 정부 정책에 공포를 느끼고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치러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권자 45퍼센트만이 투표에 갔다.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마크롱은 모든 학교와 대학이 휴교를 결정할 만큼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투표 전날에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대부분 의 카페, 식당, 식료품을 팔지 않는 매장,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 센터의 영업을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투표는 그대로 진행됐다. 사람들은 ‘집에 머무라’는 말과 ‘투표하라 가라’는 말을 동시에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일주일 뒤로 예정됐던 2차 지방선거는 코로나19가 더 널리 퍼지면서 취소됐다. 전반적으로 투표 결과는 녹색당의 전진과 마크롱의 고전을 보여 줬다.

파리시장 선거 1차 투표에서 2014년부터 파리 시장을 지낸 사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말이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일련의 그래프들이 발표됐다. 보통 그런 그래프는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지만, 보정하면 매우 어려운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을 보정하면 모두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는 직선이 된다.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은 2주 만에 거의 1000만 건에 달했다. 영국에서도 2주간 유니버설เครดิต(소득에 따른 복지 제도) 신청이 95만 건에 달했다. 또한, 2~3월 사이 영국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3.3에서 34.5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유로존 종합 PMI도 51.6에서 29.7로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IMF 역사상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멈춰 선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위기가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 미칠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이는 신흥국에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난해서 가용 자원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서비스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혹독하게 간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신흥국 노동자들이 [임시직, 길거리 행상 같은] 이른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도시 봉쇄령으로 이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 버렸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의 힌두 강경 우익 정부가 노동자 수백만 명을 가차 없이 도시에서 추아냈다. 노동자들은 경찰과 지방 · 중앙정부에게 탄압받으며 도망쳐야 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최현현

지 · 농업연구소는 이렇게 경고했다. “공식 식량 체계는 공급 충격으로부터 비교적 잘 보호됐지만, [비공식 식량 경제에 의존하는] 수많은 사람들(노동빈곤층, 비공식 경제 부문 종사자, 불안정 고용 노동자)은 갑작스럽고 장기적인 소득 손실을 겪을 것이다. 매대 위에 식량이 진열되도, 그들은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극적인

“길거리 행상은 영업을 금지당했고 시장을 잃었다. 이것은 해당 경제 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사고 먹는 것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신흥국들 중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국가다.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악영향이 더 가난한 곳들에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가 “대(大)대공황”이라 일컬을 정도로 심각한 불황의 규모 때문에 각국 정부가 기업과 임금을 지원하는 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국내 수준의 대응이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가 한창일 때는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을 이어주던 G20이 국가별 대응을 조정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경제의 3대 중심지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 사이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붕괴하면서 각국 정부는 외출 제한령을 중단해야 한다는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할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 끝 무렵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1년 넘게 지속됐다.

영국에서는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지만, 보리스 존슨 정부와 그의 보좌관들은 이미 “출구 전략”을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추측컨대, 경제를 되살리려 필사적인 각국 정부들은 대규모 검사를, 충분한 인구가 일터로 복귀해도 될 만큼 면역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데에 이용하려 들 것이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다. 바이러스는 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8~1919년에에도 스페인 독감은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유행했다.

따라서 우리는 대규모 검사와 필수 사업장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외출 제한령의 안전한 종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최현현

남아프리카공화국 빈곤 · 토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9호 / 번역 김진호

<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조셉 추나라 영국의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자본주의는 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해 원자재·설비·노동력을 작업장에 끌어모으고는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판매해 이윤을 내고 자본을 증식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더 많은 원자재와 설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노동력을 고용해 이 과정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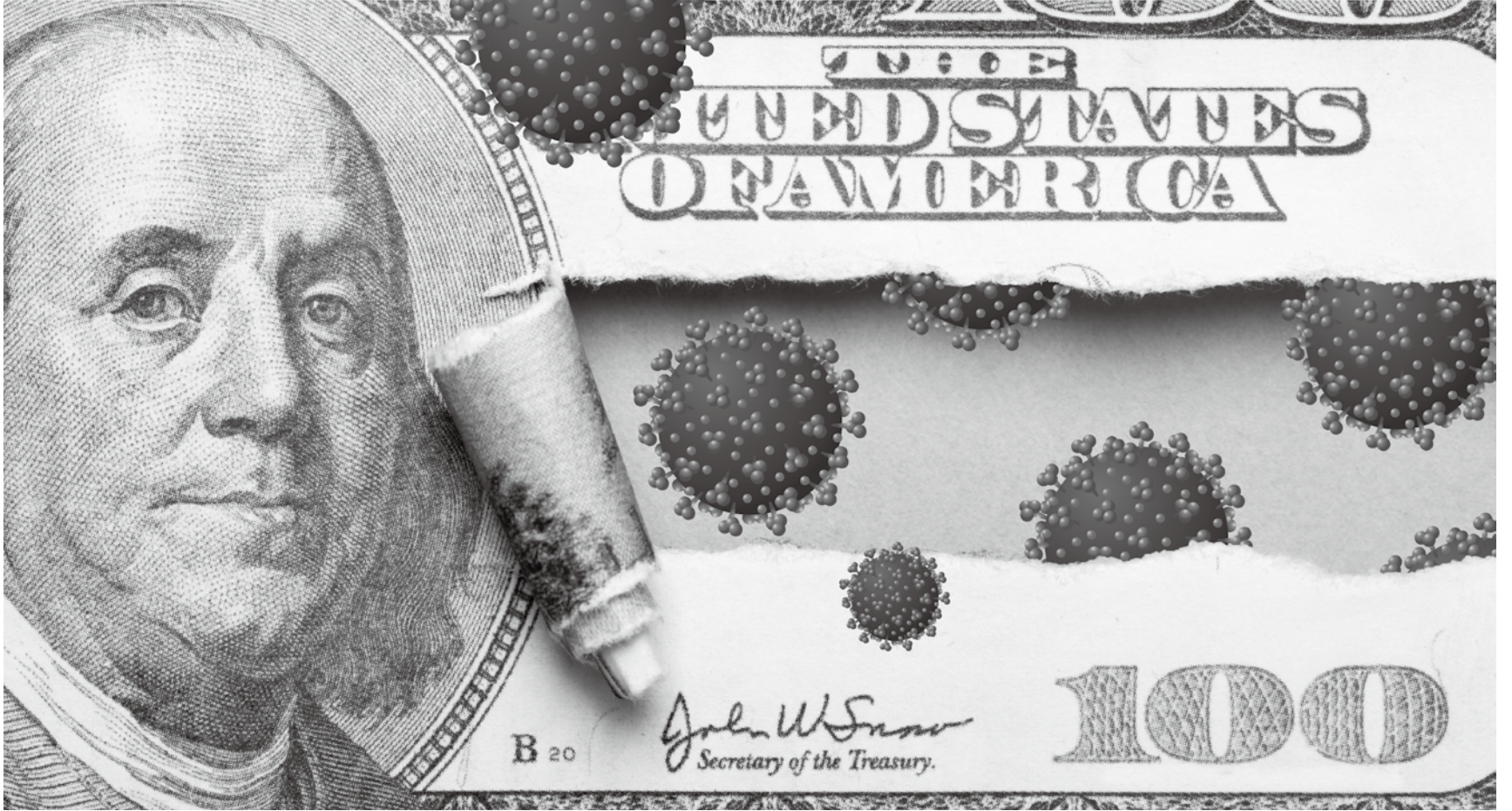
어느 곳에서든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위기가 터진다.

이번 코로나19가 일으킨 충격을 보자. 모든 나라에서 노동력의 활동이 제한됐다. 원자재·설비 공급에 지장이 생겼다. 많은 재화·서비스의 판매가 멈추다시피 했다.

이번 충격의 진원지는 중국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전자제품 제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생산망의 중심지로 부상해 왔다. 그래서 중국발 충격은 이제 세계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구성 요소들이 신용 사슬로 엮여 있어서 그 타격은 훨씬 심각해진다. 모기지·대출·신용카드 등의 형태를 띤 소비자 부채 규모도 방대하지만 기업들도 서로 돈을 빌려 주고,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고,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해 왔다.

예컨대 “기업어음” 시장 규모는 1조 달러가 넘는다. 기업어음이란 기업들이 일상적 영업에 쓸 돈을 금융시장에



서 단기간(보통 며칠에서 몇 주) 빌리려고 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이런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어느 기업에 돈을 빌려 주려 하겠는가? 이런 시장들이 수축하면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자금이 씨가 마르는 “신용 경색” 위험이 생긴다.

경제 위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때마침 유가 전쟁을 단행하는 바람에 더 심각해졌다. 그전까지는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량을 제한해 유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데에 합의해 온 덕택에,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셰일 원유 생산이 한동안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었는데 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과 유가 전쟁이 만나면 언제든지 세계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한 세계 경기 침체를 촉발한 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된 장기적 과정 때문이다.

2008~2009년에 닥친 지난번 대규모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서 이윤율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투자 수준이 부진한 결과 벌어진 것이다. 1980년대부터 자본주의 체제는 신용 확대에 크게 의존해서 작동했다.

그 결과 원자재, 주택, 첨단 기술 기업 주식 등 여러 번 거품이 생겼는데,

그 밑바탕에는 거대한 신용 거품이 있었다.

2008년은 이런 식의 확장이 한계에 이른 해였다. 위기는 거품 하나 — 손실 위험이 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 가 터지면서 시작됐지만, 과잉 확장된 금융 시스템 곳곳으로 순식간에 번졌고 경제 전반을 침체로 끌고 들어갔다.

과거에 경제 위기는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을 정리해 이윤율을 반등시키고 급격한 경기 확장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제에 개입했다.

이들은 경기 부양책을 펴고 은행을 인수하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자금]을 풀기 위해 금융 기업에게서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금리를 이례적으로 낮췄다.

이런 조처는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았지만 낮은 이윤율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십 년 동안 투자 수준과 생산성 향상이 저조했다.

설상가상으로 양적완화와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했다. 시장으로 풀려 나온 신용 상당 부분이 손실 위험이 높고 투기적인 활동에 쓰였고 주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정선영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하는 해고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셋째~넷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4~6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평균 4705만 명인데, 이 예상대로라면 미국 경제 활동 인구 3명 중 1명이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1930년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수치이다.

중국 선전탄왕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가 봉쇄된 올해 1~2월 실업자가 2억 명에 달한다. 영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0배나 늘고, 프랑스도 3월 셋째~넷째 주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400만 명에 이르는 등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협뿐 아니라 실업난까지 겪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야만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선진국보다 적은 신흥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은 고통이 더욱 클 것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85국이다. 2008년 금융 위기의 두 배다. 특히 유가 전쟁으로 인한 저유가 때문에 중동과 멕시코 등 석유 수출국들의 경기 전망도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2분기 세계 총노동시간이 6.7퍼센트 감소해 약 2억 명이 실직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특히 아랍 국가들에서는 총 노동시간이 8.1퍼센트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실업 증가

한국은 중국이나 서구처럼 강도 높은 이동 통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1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퍼센트 늘었다.

직장갑질119도 상담 사례 중 해고·권고사직 관련 건이 3월 첫째 주 8.5퍼센트에서 넷째 주 27퍼센트로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무급휴가와 연차를 강요하던 추세에서 점차 해고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에서 구조조정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인천에 있는 대한항공 기내식 협력업체는 직원 1800명 중

1000명을 해고(권고사직)했다. 나머지 800명 중 300명도 휴직 상태이다. 대한항공에서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이케이맨파워도 계약직 직원 52명을 해고했다.

하청업체들에 이어 대형 항공사의 구조조정도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지난달 10일씩 순환 무급휴직을 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15일씩 순환 무급휴직을 한다. 대한항공도 4월 중순부터 6개월간 전 직원의 70퍼센트에 달하는 인원이 3~4개월씩 순환휴직을 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 300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월 중하순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 25퍼센트 삭감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약속을 어기고 2월 임금을 40퍼센트만 지급했고 3, 4월 임금은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여기에 해고까지 추진한 것이다. 사측은 애초 직원 1600명 가운데 700명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반발이 일자 300명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안타깝게도 노조는 해고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급여 추가 반납과 무급휴직 등을 통해 추가적인 “고통 분담”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기업 부실과 이로 인한 노동자 구조조정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해 한국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그 전년도에 비해 반토막 나는 등 진작에 기업 부실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친기업적 지원

그런데 정부는 기업 파산을 막는 데에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 노동자를 살리는 데는 별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기업주와 채권자들을 위해 쓰일 뿐 노동자 해고는 막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동시에,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임금 삭감과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100조 원 기업 지원책을 발표하

가가 아찔하게 치솟았지만,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주저앉았다.

그러나 값싼 신용은 “좀비 기업”들의 생존에도 쓰였다. “좀비 기업”들은 부채를 갚으며 연명했지만 그 말고는 하는 게 없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주류 인사들도 인정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십 년 동안 기업들이 값싼 신용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고 지적하며 제너럴모터스(GM)·포드 같은 자동차 기업들, 노드스트롬·콜스 같은 미국의 대형 유통사가 부채에 의존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지배계급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어떤 면에서 보면 2008~2009년에 시행한 조치의 재탕이다. 긴급 금리 인하, 양적완화 프로그램 확대 등이 그런 사례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도 지난번 위기 때 마비된 주요 경제 영역에 개입했다. 여기에는 기업 어음 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 시장도 포함된다.(환매조건부채권은 기업들이 [비교적 장기적인] 채권 같은 담보물을 [곧 되산다는 조건으로] 팔아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다.)

연준은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로 확대했다. 이는 타국 중앙은행이 세계경제의 핵심 운할제인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십여 년 전 신용 경색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달러가 씨가 말라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용어설명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의 환율로 통화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 외화가 유출돼 달러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다.

이후 경총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을 요구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정의당·민중당 등은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 해고 금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요구도 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들을 규제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요구는 기업주의 선택에 따라 해고를 용인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업주·채권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겨레〉광정수 논설위원은 “노사정, ‘해고 없는 기업 지원’에 합의하라”는 칼럼을 썼다. 이 글에서 그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독일의 ‘노사정 상생’은 좋은 본보기”라고 했다. 당시 기업이 고용 유지 노력을 하는 대신 노조는 노동시간·임금을 50퍼센트 축소하고, 정부가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독일에서 진행된 진정

그러나 이번 위기는 중앙은행이 해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이미 급리는 이례적으로 낮다. 양적완화도 이미 대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번에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부채를 인수하고 자금을 그냥 퍼주기도 하며,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국유화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개인 계좌로 현금을 일회 지급하기도 했다. 그런 조처들은 정부가 소득을 보장하고 필수적 재화·서비스 생산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것이 더 발전할수록 필요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는 계획 경제, 즉 사회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 단지 자본주의 국가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회주의 경제는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 상당 부분이 뒤집힌 지금 상황은 적어도 그런 그런 목표를 대안으로서 제기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는 경제 붕괴와 공중보건 위기라는 두 재앙을 헤쳐 나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연대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북미, 유럽 등지에서는 이번 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상호 부조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혁명가들은 이런 연대를 자본주의의 논리와 완전히 단절하자는 호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의 논리는 거듭 실패를 드러내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20년 4월호 / 번역 김준호

한 변화는 불평등의 심화였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독일에서 2008년 이후 높아져 왔다.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을 포함해 OECD 국가들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항공업을 비롯한 위기 업종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마련된다면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기업과 대화·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가 노사정 협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노조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며 양보를 압박하고 저항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주들이 위기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노동자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들에서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부채는 탕감하고, 국유화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서평 |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정진희

미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쓴 《99% 페미니즘 선언》(원제 Feminism for The 99%, A Manifesto)이 최근 움직씨 출판사에서 나왔다.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아가 공저한 이 책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출간된 바 있다.

저자는 모두 ‘세계 여성 파업’의 조직자들이다. ‘세계 여성 파업’은 2017년·2018년 3월 8일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열린 거리 시위를 가리키는데, 2016년 10월 폴란드 정부의 낙태 금지 법안에 항의해 일어난 10만여 명의 시위와 아르헨티나의 여성 대상 폭력 반대 시위 ‘단 한 명도 안 돼!’(스페인어 약칭 NUM)에서 영감을 얻었다. 2017년과 2018년 미국의 3·8 시위는 트럼프의 반동적인 여성 정책과 긴축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동력이 됐다.

이 책은 2016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 등 고위직의 엘리트 여성이 설파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1퍼센트를 위한 페미니즘”이라 부르며 거부한다. “급등하는 불평등과 양립 가능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계급과 인종에 무신경하며 우리의 대의를 엘리트주나 개인주의와 연결시킨다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환경 정의, 수준 높은 무상 교육, 아낌없는 공공 서비스, 저렴한 서민 주택, 노동권, 보편적인 무상 의료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인종 차별 반대와 트랜스 여성 지지, 제국주의와 전쟁 반대를 천명한다.

그리고 반자본주의 페미니즘이 “99퍼센트의 페미니즘”이라고 선언한다. 여성·성소수자 차별, 인종 차별, 제국주의 전쟁과 지배, 생태 파괴 등이 자본주의에서 비롯하고, 자본주의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저항들이 외파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옹계 강조한다. “모든 억압은 각자 구별되는 형태와 특성을 갖고 있지만, 다름 아닌 동일한 사회 체제에 뿌리내리며 그에 의해 강화된다.”(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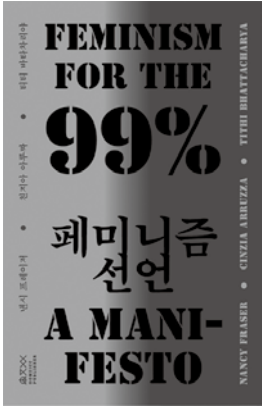
여성들의 투쟁적인 운동을 고무하며 자본주의에 맞서 저항 운동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종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모호한 몇 마디 말로 넘어간다. “모든 급진적 움직임이 공동의 반자본주의 혁명에 함께하기를 촉구”(158쪽)할 뿐이다. 마치 여러 사회운동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자본주의가 끝날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저항 운동을 지지하며 운동을 연결시키려 노력해야 하지만, 이런 투쟁만으로 자본주의가 종식되지는 않는다. 이윤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를 끝장내려면 노동계급이 혁명적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한다면 ‘반자본주의 혁명’은 공허한 선언에 그치게 된다.

이 책은 임금 노동에 대한 착취를 노동계급이 체제에서 겪는 피해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힘의 원천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자들이 ‘여성 파업’이라는 개념을 “현 운동의 주요 혁신”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과도 연관 있다. ‘여성 파업’ 개념이 노조가 벌이는 파업의 한계를 넘어서며 파업을 ‘민주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 노동 철학부터 시위, 소규모 폐업, 봉쇄, 불매운동 등 상이한 투쟁 형태들을



99% 페미니즘 선언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아 지음.

박지니 옮김.

움직씨, 208쪽

다 포괄하며 매우 모호하게 사용된다.

2017년과 2018년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3월 8일 시위는 분명 인상적이지만 이런 시위가 노동계급 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투쟁 형태인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이 교육, 보건, 복지 등을 위해 일터 밖에서 싸운 지는 오래됐다.

‘여성 파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노동계급 여성들이 다수 참가한 거리 항의 시위 형태인데, 저자들이 이를 ‘여성 파업’이라 부르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임금 노동과 무보수 노동을 통틀어 여성 노동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노동의 범주를 임금 노동에만 두는 것을 거부”하고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역할로 고정된 무상 노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드러내며, 자본이 유용하되 보상하지 않는 활동들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임금 노동에 대해서도, 노동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에 관해 포괄적인 관점을 취한다.”(34쪽).

‘여성 파업’

여성의 무보수 가사 노동이 자본주의 노동력 재생산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과 학교, 병원, 요양기관 등 ‘사회적 재생산’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계급투쟁이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런 영역에서의 투쟁을 제조업 부문의 작업장 투쟁과 부적절하게 대비시킨다.

또, 임금 노동과 무상 노동의 차이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성 파업’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용어법이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무임금 노동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내지는 몰라도, 여성 해방을 위한 효과적인 투쟁 전술이나 전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노동계급 여성이 임금 노동자로서 파업하는 것과 무보수 재생산 노동을 거부하는 것의 효과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 전자는 기업주나 국가관료가 표적이 되고 실제 파업은 자본가들의 이윤에 타격을 가하거나 국가에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지만,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표적이 분명치 않고 이윤에 타격을 주지도 않는다. 노동계급 여성이 가정 내 무상 노동을 거부하면 그 피해가 자신의 아이나 노부모 등에게 돌아간다는 난점도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차별에 맞선 투쟁을 지지하며 직장 밖에서 일어나는 투쟁에 당연히 관여해야 하지만, 이것이 생산 현장에서의 투쟁이 지니는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직장은 단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윤이 만들어지는 핵심 장소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잠재력은 생산 현장에서 자본가들과 맞는 착취적 관계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 종식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노동계급 고유의 힘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박설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퇴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 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당장 7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700억 원의 채권을 갚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쌍용차는 2016년 이후 적자를 지속해 온 데다, 올해 신차 출시 계획도 없다. 마힌드라가 3개월 동안 최대 400억 원의 일회성 자금을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는 한 달 고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구조조정 압박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사측이 내놓은 대책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병태 사장은 “2009년 법정관리 이후 최악의 비상 시국”이라며 “차질 없는 경영 쇄신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경영 쇄신”이지,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쌍용차 사측과 노조(상급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가 지난해 합의한 ‘쇄신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삭감, 상여금 200퍼센트·성과급

반납, 연차 지급률 하향, 의료비·학자금 지원 축소 등, 22개 복지를 중단하고 임금을 대폭 축소했다. 사측은 앞으로 심중팔구 더한층의 조건 악화, 인력 감축의 칼을 빼 들 공산이 크다. 그러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동자들은 2009년 부도 사태와 대량 해고 이후에도 임금 억제,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확대 등 고통을 전담해 왔다. 한편, 쌍용차 사측은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무상급 노조 지도 부도 이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쌍용차의 경영쇄신 노력 등을 감안해 [정부가]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전제로 쌍용차 자본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명분 삼아 한국GM에 8100억 원을 지원했다.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사기업 GM의 자본금 조달을 지원한 것이다. 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 일자리 수만 개를 위한 투자는 결코 “혈세 낭비”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엄청난 세금이 채권단에 빚 갚고 구조조정 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11년의 고통이 반복대선 안 된다 쌍용차는 지난 십수 년간 수차례 위기를 반복했다. 1998년 대우그룹에 매각, 1999년 워크아웃 돌입, 2004년 다



해고, 동료들의 죽음, 생계 파탄 ... 끝없는 노동자 고통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

시 상하이차에 매각, 2009년 법정관리 돌입, 2011년 또다시 마힌드라에 매각. 이런 위기가 반복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강제 휴직하고, 해고되고, 임금이 깎이고,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리고 결국 일부는 죽음에 내몰렸다. 체제의 불안정성 속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지 보여 준 것이다. 지금 또다시 마힌드라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한파로 몰아넣고 있다. 사측은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지만,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마힌드라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건을 보장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마힌드라는 이번만이 아니라 투자 약속을 번번히 어겨 왔다. 2013년과 2019년에 수백억 원의 유상증자(주식

을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지금 경영난에 처한 마힌드라그룹은 쌍용차에 대한 장기적 자금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쌍용차에서 손 떼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마힌드라 측이 일자리를 보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된 지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인 현실에서 이 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오는 5월 1일 마지막 해고자들의 복직 완료(업무 배치) 예정을 한 달 앞두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다. 11년 전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대로, 정부가 쌍용차를 직접 소유·운영(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했

다면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측에 노동자 고통전가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묻고, 국유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노동자 고통의 사슬을 끊어 낼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사실 한국 정부도 쌍용차의 반복적 위기와 비극을 만든 당사자이다. 2004년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팔아 넘긴 것도(노무현 정부), 2009년 상하이차의 ‘떡튀’를 눈감아 주고 결국 2011년 마힌드라에 팔아 넘긴 것도(이명박 정부) 모두 한국 정부였다. 무엇보다 국가는 일자리 위기에서 노동자들을 구할 경제적 능력과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경제 파탄에서 기업주들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돈은 노동자들을 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는 법정부 관리 같은 ‘일시 국유화’와는 다르다. 그런 일시적 조치로는 노동자들은 또다시 매각을 위해 해고와 조건 악화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도 정부가 실소유주로서 매각의 전 단계인 ‘법정부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영구 국유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도전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 공황에서 정부는 누구를 구할 것인가? 탐욕스러운 기업주들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켜라! 이를 위한 저항이 필요한 때이다.

1조 원 정부 지원 받고 노동자 해고하는 두산중공업 경영진 재산 몰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국유화하라

정선영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다. 3월 31일 노동자 700명가량(노조 추산)이 ‘희망퇴직’ 명목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임원들은 골프 모임을 했다. 2013년 8400명이었던 인력은 이제 6000명가량으로 줄었다. 현재 정부는 파산을 막고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조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노동자 1200명 이상 감축을 요구한다. 사측도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두산중공업 위

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년 동안 1조 2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도, 대규모 미분양으로 위기에 빠진 자회사 두산건설을 지원하는 데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했다. 게다가 10년간 배당금으로 6000억 원이나 썼다. 두산중공업의 주식 45퍼센트를 그룹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가지고 있는 만큼 배당금의 상당 부분이 사주 일가에게 흘러들어 간 것이다. 이렇게 회사의 부실을 자초한 것은 경영진이었다. 그들은 석탄화력 발전과 핵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 투자는 축소됐고, 두산중공업 전체 매출에서 70~80퍼센트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사업 매출은 2015년 5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지구온난화를 낳는 석탄화력발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사측은 당장의 이윤에 눈이 멀어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 탈핵 정책 때문?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주장들이 꽤 있다. 민주당 소속인 창원시장 허성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입장을 밝혔다. 안타깝게도 두산중공업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탈핵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 애초 공약을 어기고 현재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진행 중

이다. 이에 따라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2017년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핵발전 관련 매출은 2017년 5877억 원에서 2018년 7636억 원, 2019년 8922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물론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 중단은 두산중공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 노동계급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핵발전소 건설을 지지할 수는 없다. 노동계급의 안전과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두산중공업을 국유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실 박 씨 일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2000년까지만 해도 공기업(한국중공업)이었다. 게다가 두산중공업은 핵발전이나 화력발전뿐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

지 발전을 위한 기술도 가지고 있다. 마침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두산중공업을 “에너지 전환 전력 공기업화”하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창원성산 석영철 후보도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공기업화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 공약은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 방향이 필요하다. 두산중공업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재산을 몰수하고, 회사의 부채는 탕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국유화를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노동자들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노동자 투쟁과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국유화를 요구하며 싸운다면 다른 노동자들과 진보 진영의 광범한 지지·연대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1960년 4월혁명 60주년

민중이 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다

김동철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공저자

이윤이 우선인 체제가 낳은 두 개의 위기(코로나19와 경제 위기)가 대중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전염병·기아·독재·경제 위기·전쟁 등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절망에 대한 대안 또한 계속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글의 주제인 1960년 4월혁명일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중 운동과 좌파가 붕괴돼 저항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았던 곳에서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7년 만에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의 배경

4월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 일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극심한 부정선거가 혁명의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혁명의 원인과 배경은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4월혁명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후원하는 부패한 독재 정부들에 대항한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열강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연이어 반제국주의 저항이 벌어졌다. 그 결과 1947년 인도와 1949년 중국에서 제국주의가 물러났다. 이후 알제리와 베트남 등지에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들이 이어졌다. 1956년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1959년 미국이 후원하던 독재 정부들 가운데 하나인 쿠바 바티스타 정부가 무너졌다.

한국은 미국이 전쟁까지 치르며 지키고자 한 냉전의 전진기지였다. 이런 미국에게 4월혁명은 분명 심각한 상황이었다. 주한미군사령관 맥그루더는 시위 진압을 위해 한국이 요청한 군대 투입을 허가했다. 미국은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얘기했지만,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민중 저항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경제와 정부를 지탱시킨 힘은 미국에서 왔다. 미국은 한국에 매년 평균 2억 달러에 가까운 물자와 재원을 원조했다. 하지만 1958년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자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1960년 실질 실업률은 34.2퍼센트에 달했다. 대중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졌다.

반면 일본이 남겨둔 공장 등의 재산을 거의 공짜로 받은 자본가들은 미국의 원조를 분배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속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4월혁명에서 부정축재한 재산의 환수와 부패한 관료·기업인 처벌 요구가 제기된 것은 이 같은 계급 불평등 현실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승만은 해방 이후 미국의 도움으로 대중 운동과 좌파를 잔인하게 짓밟고 권력을 장악했고, 한국전쟁을 거치



4월혁명 당시 계엄군 탱크 위에 올라선 시위대

면서 더욱 끔찍한 억압과 통제를 실시했다. 이승만은 온건한 개혁과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조차 용인하지 않고 당수인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이승만 정부하에서 경찰은 대중을 억압하는 데 전면에 서 있었다. 이 때문에 4월혁명이 한 마을에서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에게 의해 경찰이 기름에 튀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950년대 내내 이승만은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고 취약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했고 1960년의 대규모 부정선거는 그 결과였다.

혁명의 분출

3월 15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 하향 조정을 해야 할 정도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벌어졌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시작됐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3월 15일 마산 시위 때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맞아 죽은 중학생 김주열의 시신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사람들은 자유당 관계자의 집과 자유당사·경찰서를 공격하면서 그동안 쌓인 불만을 표출했다.

4월 19일 서울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부정선거 규탄을 넘어 '이승만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경부대(지금의 청와대)를 향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에 분노한 일부 시위대는 획득한 무기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4월 25일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탱크와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의 시위 진압 시도에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사병들이 시위대 편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탱크 위로 올라가 환호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26일에도 계엄사령관

의 시위 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은 시위대에 섞여 버렸다.

지배 집단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도 이승만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침내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고 다니며 승리를 자축했다. 4월 28일 부통령 이기붕 일가는 경무대 관사에서 자살했고 5월 말 이승만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혁명의 전진과 후퇴

이승만 정권 붕괴 후 4월혁명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민주당 장면 정부가 들어섰다. 4월혁명 당시 민주당은 시위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대중의 급진화를 두려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박근혜 퇴진 이후 적폐 청산의 요구가 제기된 것처럼 이승만 하야 이후 대중은 이승만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물러난 후에도 이승만이 유지한 체제에서 이득을 얻은 세력들인 군·경찰 간부들과 관공사·고위관료들·기업주들은 여전히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대중이 부여한 적폐 청산의 임무를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적폐 청산은 민주당 정부가 기반한 기성 체제(친제국주의적인 억압적 착취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는 자신의 오른 쪽과 왼쪽의 눈치를 보면서 분명히 오른쪽으로 행동했다.

부정선거 주동자와 발포 명령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다. 민주당은 대중의 압력에 밀려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중이 원하는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처벌 대상을 결정했다. 부정축재자 처벌은 아예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검은 정부의 예산 배정 지연으로 활동이 늦어졌고 군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는 정부와 미군의 반대로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혁명이 더 전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 민주당과 함께는 아니었다. 혁명 이후 급진화 경향이 나타났다.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괴돼 침체에 빠져 있던 노동 운동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거리의 혁명에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우고 싸우기 시작했다. 1960년 한 해에만 새로 생긴 노동조합이 388개였고, 1959년에 비해 쟁의발생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4만 명가량이 조직된 교원노조는 장면 정부의 노조 인정 거부에 저항하며 1961년 5·16 쿠데타가 있을 때까지 투쟁했다.

당시 정치적 급진화의 표현 중 하나는 통일운동이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립 경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통일 국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분단됐고 전쟁을 겪었으며 미국이 후원하는 독재 정부 지배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남북 자유왕래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통일을 요구한 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반공을 내세워 체제를 유지해 온 지배 집단의 처지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움직임이었다.

장면 정부는 이승만의 국가보안법을 보강한 반공법과 집회와 시위를 제약하는 데모규제법을 도입해서 급진화 경향을 억제하려 했다. 악법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제압하려고 비둘기 작전이라고 알려진 군투입 계획까지 세웠지만 시위는 계속됐고 결국 악법 도입은 무산됐다.

이렇게 지배 집단을 긴장시킨 좌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의 급진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를 제거하고 대중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서 반동적인 대안이 준비되고 있었다. 바로 1961년 5·16 쿠데타였다.

하지만 당시 부활하고 있던 노동자

운동은 쿠데타를 저지하고 혁명을 더 전진시키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노동자 운동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혁명의 계승

미래통합당과 우파는 이승만을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라며 노골적으로 4월혁명을 모욕하지만,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4월혁명을 계승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것은 4월혁명이 아니라 4월혁명 당시의 민주당 정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단지 현재의 민주당이 4월혁명 당시의 민주당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기반에 변화가 있었지만, 둘 다 제국주의에 친화적인 착취 체제를 유지하려는 데서는 차이가 없기에 둘의 행동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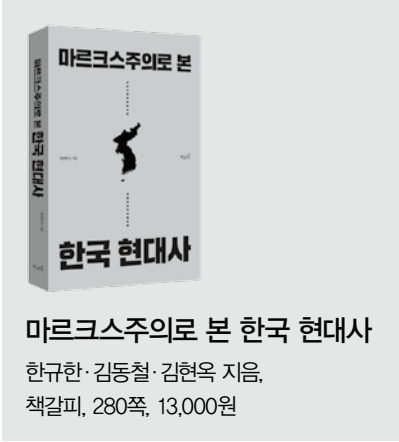
과거 장면 정부는 미국대사관과 상의 없이 중요한 조치를 취한 적이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한미동맹을 중시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이나 한·미·일 동맹 강화에서 보듯,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제국주의 세계 체제 속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한국 국가의 위상은 꽤 달라졌지만 말이다.

과거 민주당은 조봉암의 진보당뿐만 아니라 그보다 온건한 민주혁신당조차 공식정치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자유당과 함께했고 진보당 탄압을 묵인했다. 현재의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탄압을 방관했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미래통합당과 함께 진보정당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민주당 모두 진보정당의 성장이 대중 운동에 자신감을 줘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를 위협하길 바라지 않는 것이다.

4월혁명이 결국 쿠데타로 파괴된 것은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4월혁명 당시 민주당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장면 정부는 혁명의 힘을 빼고 날을 무디게 하는 구실을 하고자 했고 그 결과 반동적 대안이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지금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고개드는 지긋지긋한 우파를 제압하는 길이기도 하고 계급 불평등과 억압에서 해방을 위한 4월혁명 계승의 출발이기도 하다.

추천 책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한규한·김동철·김현욱 지음,
책갈피, 280쪽, 13,000원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과하게 승리하다

이정원

4월 6일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의 임금 인상 파업이 통과한 승리를 거뒀다.

물류창고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은 열흘 넘게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하는 투쟁을 벌였다. 광양항은 2018년 기준 국내 항만 중 부산항에 이어 둘째로 물동량이 많은 항만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나 주류 언론들은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 요구나 투쟁을 자제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항만 봉쇄 투쟁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비난 아니면 외면이었다.

화물연대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요구나 투쟁을 제대로 보도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주류 언론은 무시하고 지역 언론들은 비난만 합니다. 우리 투쟁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항만 봉쇄 투쟁은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다. 항만 봉쇄가 지속되자 운송사들은 파업을 "불법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압박에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버텼고,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하루 동안 연대 파업을 해 600여 명이 항만 봉쇄 투쟁에 동참해 사용자들을 압박했다. 화물연대 본부와 지부 16곳도 이 파업을 적극 지원했다.

4월 2일 본지는 이런 단호한 투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던 운송사들도 4월 6일에 양보를 했다. 노조의 요구였던 운임 50퍼센트 인상(1회 운송료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대략 42퍼센트 정도의 인상을 수용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비난했지만,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 라 말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키라는 요구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공 화물연대본부 사진

(위) 화물연대 전남지부 광양항 파업 집회 모습. 코로나19·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갈 길을 보여 주다 (아래) 파업 중인 화물연대 울산지부 노동자들. 화물연대는 광양항 파업 승리 후 울산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컨테이너 수송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임금)은 대폭 올라야 했다. 특히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의 운임은 그동안 말도 안 되게 낮게 책정돼 있던 탓에 68~110퍼센트까지 오르게 돼 있다. 노조는 이보다 낮은 인상률인 50퍼센트 인상을 제시했다.

화물업계 최저임금 '안전운임'을 보장하라

안전운임제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노동자들의 열망이 상당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순순히 임금 인상을 따르지 않으려 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을 강제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한층 심각해지자 사용자들은 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이윤에 타격을 주는 행동에 나서 적잖은 임금 인상을 얻어 낸 것이다. 연대 파업의 효과도 중요했다.

이번 파업의 승리로 노동자들의 기세는 상당히 올랐고, 특히 노동자 수백 명이 노조로 가입하는 성과도 났다.

울산으로 파업이 이어지다

다른 지역의 화물 노동자들도 이번 투쟁을 주시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아직 제대로 안전운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이 운임을 대폭 인상하는 승리를 거둬 매우 기쁩니다. 저 말고도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광양의 투쟁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승리에 이어 곧바로 다른 지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공 화물연대본부 사진

으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광양항 파업 승리 이후 울산에서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4월 8일 오전 8시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파업에 돌입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금호석유화학 출입구 세 곳을 막고 있다.

이곳도 운송사가 안전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기존의 운임 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며 지

급을 유예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운임을 깎으려는 꼼수 등을 쓰고 있다고 한다.

광양항 화물 노동자 파업의 승리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울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이 기세를 이어 가길 바란다.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 (특별재난강령)

2020년 3월 26일, 노동자연대

-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비용을 지급하고, 휴교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라.
- ⑥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공공시설 거주자들에게 긴급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
- ⑦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주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라.
- ⑧ 정부가 재난생계소득 100만 원을 즉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라.
- ⑨ 노숙인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라.
- ⑩ 특정 집단에 대한 속죄양 상기를 중단하라.
- ⑪ 집회 금지 조치 등 정치적 억압 반대한다.
- ⑫ 상가와 주택 월세 납부 및 부채 상황을 유예하라.
- ⑬ 노동조합은 정부가 이런 요구를 채택하도록 광범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신간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중 외 지음
장호중 엮음, 책갈피, 208쪽, 12,000원